

한국사회의 민·군 관계 양상 고찰

— 5·16 군사정변이후 대군인식을 중심으로 —

宋 秀 勇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담당장교)

1. 머 리 말
2. 민·군 관계의 개념과 대군인식
3. 군 변화 요구의 당위성: 대군인식 변화의 역사적 산물
4. 민·군 관계의 발전방향
5. 맺 음 말

1. 머 리 말

21세기를 맞이하여 군은 그동안 꾸준히 수행해 온 내부적 변화 및 대민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문민통제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대국민과의 관계면에서 '신뢰받는 국군상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국민이 국방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모든 국가 조직의 통합성, 유기적인 기능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유독 군을 여타 조직과는 달리 별도의 고유 영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의 일반 대중이 군을, 군의 조직원인 군인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스개 말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민간인과 군인의 숫자를 엄격하게 구분 짓고, 군인들의 잘못된 행위(예: 대민 피해, 비리 및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방법과 그 비판 강도는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일반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군이 지니고 있는 고유가치에 대한 특별한 인식 외에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군이 행해 온 역할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사회에서 군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이래 민·군 관계의 관점에서 군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민의 시각을 진단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민의 대군인식 중 긍정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갈등 요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민·군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민·군 관계의 개념과 대군인식

민·군 관계의 역사적 기원은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¹⁾ 군사

력이 대내·외의 안전보장을 확보해야 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그 본질 자체가 조직된 폭력이기 때문에 그 같은 기능을 역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복지, 자유 그리고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로서 민·군 관계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²⁾ 현대적 의미의 민·군 관계는 기본적으로 군대와 민간권위의 기능이 분리된 이후의 일로서 그 학술적 정의를 Harold Stein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결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면서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지도자와 민간정치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관계로 정의하였으며,³⁾ S. P. Huntington은 군대가 갖는 권위, 영향력 그리고 이데올로기 사이에 존재하는 복합적 균형관계로서 민·군 관계를 보았다.⁴⁾ 한편, Jacques Van Doorn 교수는 민·군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군대집단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작용 상태 및 내용, 국가사회 구조 내에서 민·군 엘리트 간에 이루어지는 역할 분담 및 상호 경쟁과 갈등의 양상관계로 정의⁵⁾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때 민·군 관계의 개념은 상당히 복잡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대집단과 민간부문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 및 그 양상이 두 개체간의 인식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 특히 군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행해 온 역

-
- 1) 정치학적 민군관계론 연구현황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고찰은 김영명,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브라질·페루·한국·이집트의 비교연구」(서울: 한울, 1985), pp. 16-36 참조.
 - 2) 李東熙, 「韓國軍事制度論」(서울: 一潮閣, 1982), p. 64.
 - 3) Harold Stein, "Introduction", in S.P. Huntington(ed), 「American Civil-Military Relations: A Book of Case Studies」(Birmingham: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3), p. 23.
 - 4) S.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참조.
 - 5) Jacques van Doorn, "Armed Forces and Society: Patterns and Trends," in van Doorn(ed.), *Armed Forces and Society*(The Hague: Mouton, 1968), pp. 39-54.

할에 대해 민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군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의 역할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여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 엘리트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를 진정시키고 군과 정부에 만연했던 부패를 일소시켰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육성시켰으며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기여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이 근대화 추진의 중추기관으로서 당시 군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었던 군행정제도와 관리기술을 사회에도 전파⁶⁾하고 군 특유의 조직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에 군이 근대화 추진기관으로서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군이 사회의 한 전문 직업집단의 역할과 거리가 먼 정치의 주체가 되어 내외적 안보를 명분으로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가진 정치의식의

6) “한국군은 1953년부터 통역장교반, 장교군사영어반 및 특별군사영어반 등의 이학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수백 명씩 교육시켜 1974년까지 10,542명을 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선진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였다. 또한 군조직의 효율적인 행정 및 관리를 위해 장교들을 대상으로한 교육과정으로 일반행정 및 인사관리반 그리고 경리사관반을, 하사관 및 사병들을 위해 숙기반, 인사행정, 한글타자반, 영문타자반, 경리하사관반, 회계사반, 관리반, 지휘관리반 등을 개설하여 년 간 수천 명씩 1974년까지 총 50,000명 이상을 교육시켜 군의 관리와 행정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군은 미국의 최신 기본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국에서 교육받은 고급장교들에 의해 기획제도를 발전시켰다. 1960년 초반까지 군은 어느 조직보다 제반 인적, 물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고도의 기술 및 지식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체계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군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잘 교육된 국가적 규모의 체도로 발전하여 기술과 조직 운영관리 기법을 사회에 전수시키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의 민군관계』, 1992, pp. 39-41).

집합적 행태의 개념인 정치문화⁷⁾의 성격을 좌우하고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의 역사는 유교가 정착되기 시작한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⁸⁾ 특히 군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는 위에서부터 말단 행정단위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관행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목표 지향적이며 엄정한 군기를 바탕으로 일방적 상명하복을 절대생명으로 삼고 있는 군 조직의 특성⁹⁾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정치권력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권력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소수의 개인 또는 측근의 참모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유발했으며 정치, 행정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론에 기초한 정책결정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정당과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정치과정으로서 선거, 토론과 같은 절차가 효율과 능률에 압도되어 경시되는 풍토를 낳았다. 한마디로 군의 정치개입을 계기로 행정체제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은 이룩되었지만 민주주의의 제 가치들이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고 군 특성에 기인한 권위주의적 관행은 더욱

7) Lucian Pye and Sidney Verba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221.

8) “한국사회에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은 가부장적 전통, 엘리트 관료주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전통 유교사상에 따른 위계적 사회구조와 계급의식, 제한된 사회적 유동성, 관료적 권위에 대한 탐욕성, 관의 지배와 민의 복종적 전통, 일제의 식민통치, 자본주의제도 도입에 따른 금전만능과 배금주의 사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군의 정치적 개입보다 더욱 깊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p. 132-133).

9) “군기는 군대의 규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한국군의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4호).

심화되었다.¹⁰⁾

민이 군을 보는 시각은 군의 명예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어 있다. 1970년대 말까지 각종 연구단체들이 실시한 정치·사회 의식 조사결과에서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언제나 군부가 1위에 오르는 등 군이 느꼈던 자부심은 대단했다.¹¹⁾ 그러나 1979년 12·12사건과 그 다음해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대다수 직업 군인들은 군의 명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간인들은 군복을 입고 다니는 군인들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고 많은 장교들이 군 명예의 상징인 군복을 입고 다니기가 거북했다고 실토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특히 1988년과 1989년은 5공화국 등 과거청산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에 군인들이 불려나와 곤욕을 치렀고 언론을 통해 군부의 특권의식 등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므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보호에 매진해 온 대다수 군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¹²⁾

1990년대에 들어서 군은 군 의식전환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군 화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군의 위상확립을 위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¹³⁾ 한국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집단에 대한 당시의 여론조사에서도 군은 국회의원이거나 학생세력, 재벌 다음으로 물러났다.¹⁴⁾ 이러한 사실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에 의한 소위 군사문화¹⁵⁾ 청산 조치가 국민 여론에

10) 신명순,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이동희 편, 「민군관계론」(서울:일조각, 1990), p. 314.

11) 金在洪, 「文民시대의 군부와 권력」(서울:도서출판 나남, 1993), p. 11.

12) 金在洪, 앞의 책, pp. 258-266 참조.

13) 군은 그간 정치와 사회문제에의 지나친 관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위로부터의 의식혁신 및 솔선수범을 통하여 어떠한 시국상황에서도 동요됨이 없이 국방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함으로써 군 스스로의 긍지를 고양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진심어린 신뢰와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의 대전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1990년 국방백서 제5부 제1장 제1절, 「군의 새위상 확립」).

14) 金在洪, 앞의 책, p. 11.

15) “군사문화란 군사현상과 군조직내의 문화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광의의 의미로서 사회의 시대적 또는 상황에 따라 특별한 가치판단적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힘입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군 스스로도 그동안 외부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제 김대중 정부에 이어 3대째 문민정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의 대군인식의 틀도 사회 발전 속도만큼이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군을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조직으로는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생사문제와 관련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군 자체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군이 관련된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 시각을 보인다.

이는 지난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당시 일부 국민은 이 사태를 군의 존재가치 문제 즉, 군의 명예와 역할에 관한 본질적 문제로 인식한 바 있다.¹⁶⁾ 이는 완전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아직도 미완의 과정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옴에 있어서 이제는 정치권의 영역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진정 한국군 고유의 성역(聖域)과 군대문화¹⁷⁾를 구축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김정식, 『새세기를 지향해나갈 군사문화』(육군 제90-3호, 1990. 3), p. 66).

16) 2002. 6. 29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하여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 고도 정치권을 의식하여 이를 무시했다”, “정부의 편파적인 대북정책으로 군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권으로부터 회생당하고 있다”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17) “군대문화란 군대조직 내에만 국한된 조직문화라는 협의의 의미다”(육군 제90-3호, 김정 식, 앞의 글).

3. 군 변화 요구의 당위성: 대군인식 변화의 역사적 산물

근대화 과정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는 한편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으로 군의 정치 개입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는 현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입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¹⁸⁾

군에 대한 거부감의 가장 큰 요인인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군의 성향을 군의 기능, 정부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등의 관점에서 구분한 Alfred Stephan의 이론에 의하면 한국군은 신직업주의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Alfred Stephan이 구분한 군의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통상 외부와의 전쟁에 관심이 쏠려있는 군직업주의를 구직업주의(old professionalism)라 부르고, 내적안보와 국가발전에 관심이 쏠려있는 군직업주의를 신직업주의(new professionalism)라고 한다.¹⁹⁾

한국의 경우 군의 정치개입이 주로 내적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일어났고 그 행동의 범위 및 사회에 미친 영향요소를 고려할 때 명백히 신직업주의의 성향을 지닌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적인 상황 하에서 어떠한 내적 위협이 군의 정치개입을 자극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치개입은 어느 정도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하다.

18)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 41.

19)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p. 149-150.

<표 1>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의 차이

구 분	구직업주의	신직업주의
군부기능	외적안보	내적안보
정부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일반국민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	사회의 분파들이 정부의 정통성에 도전
필요한 군사기술	정치적 기술과 양립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고도로 상호연관된 정치적, 군사적 기술
군부의 전문적 행동의 범위	제한적	무제한적
전문직업적 사회화의 영향	군부를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킴	군부를 정치화시킴
민·군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비정치화와 문민 정치에 기여	군사적·정치적 관료주의와 역할 확장에 기여

출처: Alfred Stephan,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Abraham F. Lowenthal(ed.), *Armie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New York:Holmes & Meier Pub. Inc., 1976), p. 248.

<표 2>는 한국의 정치사에 나타난 군의 정치개입 내지는 정치적 동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안보위기와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군이 정치의 장에 개입 내지는 동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의 정치개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정치의 민주발전과 더불어 군의 탈정치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한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의 정치개입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군은 실제 제3공화국 이래 군의 정치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위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제6공화국 이후부터는 군부집권의 장기화와 반복상황으로 인해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대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은 내부적으로 노력을 적극 경주해왔다.

<표 2> 계엄 역사

사 유	계엄종류	기 간	지 역	비 고
제주도 4·3사건		1948.10.17~1948.12.31	제주도 일원	
여수·순천 10·19사건		1948.10.28-종료미상	여수, 순천지구	
6·25전쟁	비상계엄	1950. 7. 8~1953. 8.26	전국 또는 지역	3년 49일간
4·19혁명	경비계엄	1960. 4.19, 13:00	서울지구	4시간
	비상계엄	1960. 4.19, 17:00~ 1960. 6. 7, 16:0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이후 전국	50일간
5·16군사정변	비상계엄	1961. 5.16~1961. 5.27	전국	12일간
	경비계엄	1961. 5.27~1962.12. 5	전국	556일간
6·3사태	비상계엄	1964. 6. 3~1964. 7.29	서울일원	57일간
10월 유신	비상계엄	1972.10.17~1972.12.13	전국	57일간
부산소요사태	비상계엄	1979.10.18-전국계엄에 흡수됨	부산지역	9일간
10·26사태	비상계엄	1979.10.27~1980. 5.17	전국(제주도 제외)	455일간
		1980. 5.17~1980.10.17	전국확대	
		1980.10.17~1981. 1.24	제주도 제외 전국	

출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정치연표(1945-1984), 입법참고자료 제235호
 참조: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0), p. 236에서 재인용.

1989년부터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방태세를 전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취지 하에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군의 정예화와 직업군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군인사법의 개정²⁰⁾을 비롯하여 군 본연의 위상과 복무자세 재정립 및 군 의식전환운동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규율의 개정 등은 이러한 군 내부 노력의 산물들이다.

20) 1989년 3월 개정(법률 제4085호)하였는데 직업군인의 정년과 진급에 관한 제도를 대폭 수정한외 군대내 우수자원의 조기 방출을 방지하고 간부의 자결향상과 원숙한 전문 인력의 장기 활용을 가능케 하는 등 군의 직업성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6·29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자유화와 민주화의 과정은 단순히 통치방식과 정치질서의 변환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적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사회의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²¹⁾

군대 내에서도 일본군의 잔재인 각종 병영 폐습이 사라지고 병사들에 대한 지휘도 강압적인 군기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군기사고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옛날과 달리 군대의 군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간간히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의 정착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전환과 의식각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의 정치적 개입과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강한 반발심리가 작용하여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군을 권위주의적 문화의 산실인 것처럼 간주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군의 정치개입에서 파생된 소위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민·군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급기야는 군대내 극소수 과격한 장교들이 월간지에 게재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글에 자극을 받아 그 글의 필자에게 테러행위²²⁾를 가한 불미스런 사태로까지 발전한 바도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군 개혁을 위한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군 위상확립을 위한 군 내부적인 노력이 가일층 전개됨으로써 민·군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교 및 하사관들의 복지 및 직업성 보장, 병사들의 의무

21)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 127.

22) 1988년 9월, 당시 중앙경제 오룡군 사회부장이 출근길에 3명의 피환으로부터 칼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 수사결과 정보사령부 소속 장성 2명을 포함한 현역군인들이 저지른 행위로 밝혀짐.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제도의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지는 등 군이 정치권력 장악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과도기적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일각에서는 군을 심층 깊게 알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났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군대가 아프리카 전선에서 갑옷이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패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련군이 조직의 결집력을 잃은 나머지 10여 년간이나 악전고투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과 없이 철군했던 사실²³⁾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작지만 강한 군대, 상무기풍이 왕성한 군대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 군이 국민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각종 군 관련 불명예스런 사건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신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군 스스로 환골탈퇴를 하라는 애정 어린 목소리였다.

한국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 조치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군대만은 아직도 성역화된 거대한 조직으로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각종 사고로 생명을 잃은 장병들에 대해 군이 고의적으로 죽음을 은폐해왔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군 내부적으로 군납, 군 공사 및 인사비리 사건 등이 장기간 끓었다가 터져 군의 도덕성 및 신성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급기야는 민주사회에서 국민모두에게 지워지는 신성한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건 즉, 일부 특권층 자제들이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고, 발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함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公憤)과 불신을 산 바도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방행정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3) 李善浩,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2), p. 3.

또한 군복무를 경험한 대다수의 청·장년층은 군복무에 대한 야릇한 향수를 가지면서도 군대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문제인 국방조직과 예산의 운용측면에 대해서 군사전문가다운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납세자이고, 군대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의 군사력이며,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인지의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국방예산이 책정되고 있고 군이 효율중심의 시스템 운영원리에서 벗어나 마치 중병에 걸려있는 공룡과 같은 비만한 조직체²⁴⁾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조직에 내재된 문화 및 속성 또한 아직도 일본과 미국의 군대문화²⁵⁾ 영향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최근 군사조직의 혁신 문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위협의 성격,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의 전력에서 탈피하여 육·해·공군의 균형전력으로 조직이 재조정되어야 하고 다병주의에서 정병주의로, 조직의 경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군이 그동안 군사적 폐쇄성과 더불어 장기 발전전략의 부재 속에서 병력의 양적 팽창은 계속되었으나 질적 변화를 병행시키지 못한 나머지 조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향한 국방조직의 획기적인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창군 이래 전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군 조직 발전을 추구해 온 군 자체의 노력은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남자라면 누구나 병영생활을 직접

24) 한국군 조직의 특성을 “불필요한 유사·중복 기능부대 및 기관의 곱빼기 편성에다 전투 임무 부대보다는 비전투임무 부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낭비·비만형 조직이며, 장성을 비롯한 상위직급의 정원 과다 책정으로 인한 가분수의 불안정·불합리 조직이고, 지상군 절대 우위·해공군 상대열세의 제도적·구조적으로 편중된 파행성 불균형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있음(李善浩, 앞의 책, pp. 47-61 참조).

25) 군대문화란 군내부에서 생성·발전되어 나온 모든 상징체계를 말한다.

체험하기에 일반 국민들의 군대생활에 대한 평가는 아주 현장감이 있고 객관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부모나 성년이 된 자식을 군대로 보내면서 군에서 아무 탈 없이 바람직한 것만 배워서 사회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2년이 넘는 군 복무기간 중 병영 내에서의 생산적인 사회화 교육²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시기에 있어서는 군대의 사회화 교육은 큰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의 제대 장병들은 병영생활을 통해 습득한 군대교육과 체험요소들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부모들은 “군대가서 사람 되어서 왔다”며 군대의 사회화교육 기능을 호평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급속한 사회구조의 다변화 과정을 경험, 의식성향에 상당한 변화를 갖고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군의 사회화 교육은 대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 조직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사회 변화, 청년들의 의식변화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부재함으로써 신세대 장병들에게 군이 추구하는 목적적 가치(임무완수)와 수단적 가치(명령과 통제)들을 명쾌하게 인식시키지 못했다.²⁷⁾ 이 시기에 있어서 자살사고, 탈영사고 등 군대내에서의 각종 군기사고가 빈발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발전의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군 간부 집단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시대흐름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노력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전문성, 효율성 위주로 체계가 변화, 발전되고 있음에 반해 군은 편의주의와 형식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간부들

26) 군복무 기간을 하나의 사회화 과정으로 파악, 백종천, 『국가방위론』(서울:박영사, 1985), p. 568 참조.

27) 군복무의 순기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백종천, 앞의 책, pp. 566-567과 장용선, “군복무가 후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년연구』(서울: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1), 제14집 참조.

은 민의 가치와 군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휘·통솔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추구해온 젊은 병사들로 하여금 군대가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앞서 군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 한국사회에서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민과 군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의 군사적 안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차는 민·군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 갈등요인이 되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안보를 책임지고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남침에 대한 국민적인 위협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 북한 전쟁억제 기능은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한국사회의 상대적인 국력증대와 미국-중공, 일본-중공의 국교수립을 통한 한반도 주변의 화해정치 분위기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기 시작하였다.²⁸⁾

즉 197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는 그 차이가 3배, 1989년에는 7배로 벌어짐으로써 당해년도 군사비의 지출총액에서도 한국이 우세를 점하는 등 한국의 전체 국력이 북한보다 우세를 보이고²⁹⁾ 국제질서 또한 양극체제하에서 체제간 경쟁이 보여주

28)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 146.

29)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여기에서 그는 1980년대 말 각국의 국력을 평가하고 있다. 인구와 영토(C), 경제력(E), 군사력(M)을 평가치로, 한국은 C요소 20점, E요소 5점, M요소 8점으로 평가되어 총 33점이고, 북한은 C요소 5점, E요소 0점, M요소

던 제로섬(Zero-sum)적 사고가 상호이익을 존중·조화시키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도 기존의 진영간 대립이라는 안보논리로부터 벗어나 각 진영의 구성 국가들이 쌍무적·다변적인 관계를 형성³⁰⁾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과거와는 달리 용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군이 수행하여 온 대북한 군사적 억제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산업화가 가져다 준 우리사회 제 분야의 다원화 및 전문화 추세와 더불어 국가안보의 영역도 과거 군사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에서 오늘날 식량, 에너지 등 전략자원의 수급 측면까지 확대³¹⁾됨으로써 군의 군사적 역할 수행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갔다. 민은 군의 기본적 임무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군의 입장과는 다른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민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빚어진 복합적인 갈등구조를 경험하고 그 이후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의 대세에 편승해 오면서 군에 대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마디로 역사적인 산물이다.

군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긍정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점점 커져온 비판적 목소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 상황과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딜레마적 성격을 지닌 우리 정치(군이 개입된 정치)와 경제, 대외관계,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10점으로 총 15점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유형적인 요소들은 무형적인 국력요소인 전략 의도와 국가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0)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Random House, 1987).

31) 리처드 솔로몬(Richard H. Solomon), “냉전에서 열띤 경제활동으로”, 『시평』(1992년 제 2호), p. 74.

4. 민·군 관계의 발전방향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5일 육사49기 졸업식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군인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명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 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文)과 무(武)는 한 뿌리 위의 한 나무로서 역할이 다를 뿐이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두 수레바퀴로써 군은 밖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민·군 관계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³²⁾

통상 현대국가에서의 올바른 민·군 관계는 민과 군이 대립적 공존관계가 아니라 화합적 공존관계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의 특성인 일반성, 다양성, 복잡성이 군의 특성인 권위성, 획일성, 단순성과 상호 보완적 공존관계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³³⁾

한국사회에서의 건전한 민·군 관계의 확립은 군 스스로의 노력과 군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군이 행해 온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민·군 관계 형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이 정치에 개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범한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올바른 민·군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군의 정치

32) 조선일보, 1993년 3월 6일자 기사.

33) 趙永甲, 『韓國民軍關係論』, p. 756.

개입이라는 역사적 명예에 대한 민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한국 정치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담보 상태가 계속되었고, 군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지만 군부정치가 종식된 후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군이 과거의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투명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오히려 그 진척 속도가 빨라 군이 군으로서의 야전성을 상실해가며 그 일체성을 잃어간다는 비판도 있음을 상기할 때 민이 군의 과거 업보에 대해 지나치게 모멸감을 주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잃게 하는 응징적 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대범한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군내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군내에서 발생한 각종 대소사건, 특히 비리문제에 대해서도 민의 접근방식과 그 비판시각은 다른 조직과는 달라야 한다. 부정과 비리는 척결되어야 하기에 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집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리사건을 두고 마치 군이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이고 앞으로 계속될 잠재적 비리의 집단으로 인식하여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군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안보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발생한 비리사건에 대한 군 내부의 조치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가장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라는 상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민의 요구충족에 부응하여 군의 열린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국방정책의 개발, 군사력 건설, 군구조 개선 등 군조직의 운영·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조치에 의해서만이 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우선 군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성숙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군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의 폐쇄적 국방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이해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열린 국방’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감한 열린 국방을 통해 국방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보이지 않는 민·군 간의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고 민으로 하여금 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군은 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방현안과 국민적 관심사항 등 국방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방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³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군의 사회화 교육에 중심을 둔 병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민의 대군인식의 대부분이 군에 들어간 병사들의 직접적인 체험의 현장이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병영생활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군의 사회화교육 기능을 포함한 병영생활 전반의 개선 조치는 군이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34) 국방부에서 2004년 11월 15일 발표한 것으로 우리 국방의 여건과 현 좌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국방운영 중점과 방향을 문민통제체제 발전,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건설, 통합 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과거부터 병영시설 및 군 숙소 개선 등 병영 환경과 복지여건, 그리고 각종 처우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거 잘못된 관행 및 병영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신병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가혹사건으로 군내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 사안이 된 바도 있다.

군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어느 민간인은 아직도 군내에서 인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그 요인을 군 임무의 절대적 성격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흐트러진 군 기강 때문으로 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⁵⁾ 반면, 어느 민간대학 교수는 흐트러진 군 기강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극히 일부분이며 오늘날 우리 군은 약간 흐트러져 보이기는 하지만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³⁶⁾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군의 병영문화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군이 그동안 과거부터 오래 동안 병영저변에 존재해 왔던 병영의 악습을 척결하고 신바람 나고 활기찬 병영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지휘·통제하는 간부들에 대한 의식개혁과 리더십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발전의 속도만큼이나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환경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간부들에게 단기간 내 효과를 얻기 위해 일종의 행동강령을 전파·교육시키는 것보다 군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미래 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 교육과 의식개혁을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35) 독고순, 「군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국방저널, 2003. 10), p. 36.

36) 장일순, 「군기강 매도할 수준 아니다」(국방저널, 2003. 10), p. 40.

1806년 예나·아우에르슈테트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참패한 후 추진된 프로이센 군대의 개혁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군의 리더십 철학은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군 리더십 철학은 국가의식 고취, 군과 국민의 통합 연결,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각종 가혹행위 금지 등이 개혁의 주 내용이다. 그리고 군인은 국민이면서 군인이므로 국민으로서 받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요구와 군인으로서 받게 되는 군사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이념과 군사적 절대성 간 결합 가능성의 모색, 군인에게도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군대에서 경험토록 하고 있다. 즉 독일군의 리더십은 의무병역제를 채택하고 있는 성격의 군대에서 국가 또는 민간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포괄적인 지휘개념인 것이다.³⁷⁾

예컨대 한국군의 리더십도 민주주의 특성과 군대 특성의 균형·조화를 통해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인간, 책임을 자각할 줄 아는 국민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화 교육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보위협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해야 한다.

안보위협과 관련된 민·군간 시각차가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이 주목된다.

“참모총장님, 50년 전 군에서 받은 표창장의 수여자를 이제야 만나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2002년 6월 26일 미국의 해군 항이 있는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의 ‘한우리’ 식당, 70대의 교포 노인은 미국이 주최한 6·25

37) 조영갑, “통합적 리더십 발휘와 민·군 관계”(국방일보, 2005년 1월 27일자).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이곳을 방문한 백선엽(白善燁, 82세) 예비역 대장에 게 거수경례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보다 더 감개무량해진 백 장군. 평양에 1호로 입성했던 그의 '역사'를 환대해 준 것은 미국이었다. 노퍽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과 올드 도미니언 대학이 이틀 동안 공동 개최한 6·25 세미나에 미국 측은 백 장군을 초청, '영웅'으로 대접했다. 미국측 인사들은 그가 참모총장으로 고속 승진했던 야사(野史)까지 발굴해 내며, 6·25의 구석구석을 되짚었다. ……

점점 잊혀져가는 6·25의 교훈을 후대(後代)를 위해 되살리려는 이 같은 미국의 모습을 보면 가끔 부러운 생각이 든다. 백장군은 이틀 후인 2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한국의 서해에서는 남북한 간 교전으로 해군 4명이 전사하고 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사를 소중히 여지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³⁸⁾

한국 사회는 지난 1970년대 중반이후 군사적 기능의 범주와 군의 역할범위에 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민과 군사간의 안보위협 인식 차이는 점점 더해갔다. 이러한 인식 차이의 주요 원인은 우리의 국력신장과 상대적으로 북한의 열세,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이다.³⁹⁾

1980년대 말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국내정치상황(42.2%), 부정부패(30.4%), 사회의 빈부격차(28.1%), 노사분규(24.6%), 학원소요(21.8%), 공산주의사상의 전파(20.4%)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북한의 위협을 지적한 경우(7.9%)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일면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⁴⁰⁾으로 이후 그 위협인식의 변화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되어갔다.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민이나 군이 보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

38) 「조선일보」 2002년 6월 29일자.

39) 육군사관학교, 위의 책, p. 135.

40)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의식조사 : 성향분석과 대응책」(1989. 12), pp. 182-183.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전쟁은 없다”고 보는 민의 시각과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기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군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국익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9·11테러이후 전쟁의 개념이 달라지고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위협 요소만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현 안보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금은 북한의 군사적 물리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 반인륜적 무기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⁴¹⁾의 폐기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 및 이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기에 우리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민과 군은 북한의 위협 여부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정치적,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의 독립권과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를 두고 당파적 정치논쟁으로 일관하다 임진왜란을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힘이 없으면 전화(戰火)에 시달리고, 평화의 시기에도 강대국의 힘에 휘둘리면서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민과 군은 국가의 경제력에 걸맞는 힘을 비축해 나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41) 한번 사용으로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서 핵, 생·화학무기 및 이들 운반체인 미사일무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들 무기의 개발·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NPT, CTBT, BWC, CWC, CCW, ZC, NSG, AG 등)에 가입하여 인류평화의 문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함. 보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발간 군비통제자료집 참조.

5. 맺 음 말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 더구나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취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민·군 관계는 군은 민을 보호하고 민은 군을 인정하는 민·군일체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과거 두 번에 걸친 군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경계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6공화국 이후 민주화와 문민화의 진전에 따라 민·군 관계 개선을 위한 군내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과거 군의 정치적 관여사실에 대한 멍에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다. 민은 우리 사회 내 권위주의적 문화의 원천이 보다 깊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개입으로 민주화의 진전이 지체하였고 권위주의 문화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안보현실에 대한 민·군 간의 인식차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중요 갈등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다. 전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사회 제 분야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국가존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시각차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은 그동안 군이 안보위기와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정치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현장을 목격하면서 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불신의 골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 제 분야의 다원화 및 전문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도 '북한의 위협'인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상호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의 역할, 조직 운영에 관한 측면에서도 민은 군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각종 부조리, 비리, 투서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수준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군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장기간 단절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지나

치게 폐쇄적이고 황하지와(黃河之蛙)와 같은 시각⁴²⁾을 가지고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민은 군이 과감하고도 투명성 있는 열린 국방행정을 통해 선진국방의 면모를 조기에 이룩하고, 군대가 국민 교육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의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는 군인이면서도 자유와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민이 군을 바라보는 굴곡된 시각과 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한국사회에서 군이 수행해온 역할의 역사적 산물이다. 긍정보다는 부정의 산물을 극복하는 문제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군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몫이다. 비중을 따진다면 군의 몫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이 사회전면에 나설 수 없는 민주적 문민통제 상황 하에서 민의 대군 인식의 변화가 군내부의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은 군이 권위주의로 인식되는 군대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성숙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음으로써 민과 군 간의 거리감이 해소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5. 3. 11,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정치개입, 권위주의, 민·군 관계, 군대문화, 문민통제

42) 황하의 개구리가 바다 구경을 하러 온 우물안의 개구리들에게 황하를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는 넓은 수평선, 일렁이는 파도, 이것이 바로 바다란다”라고 자랑했다는 故事로서 자신의 소견으로만 세상을 인식하는 좁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the Civil Viewpoint toward the Military -

Song, Soo-yong

This study intends to undertake an in-depth research on the civil perspective toward the military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socio-political role in Korea. In so doing, the objective is also to provide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and military sector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Generally speaking, Korean people assess that the military has contribute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political and social settings during the course of modern development in Korea. A prominent negative viewpoint toward the military is that the military had intervened in politics for a long time and brought about authoritarianism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military has made every endeavor to bring about democratization and to completely return its power back to the civilian sector since the 6th republic, its historical yoke of political intervention is not yet to be thrown off.

The gap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perceptions toward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related security issues, has recently become an outstanding source of conflicts in Korean Society. These conflicts result from the underlining civil distrust stemming from the political intervention

committed by the military in the past.

It is perceived that the military has become exceedingly narrow and closed-minded, having been isolated from the societ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civilian sector requests that the military must establish and develop an advanced defense system through transparent and open administration. The society hopes that the military train the young generation to become good soldiers, dedicating themselves to the nation, and good citizen, respecting freedom and public order.

The aforementioned negative perceptions and requests on the military are the historical products of the military role and activity. To overcome these negative byproducts, The civil have to try to be broad-minded to the historical fact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to politics, and to be prudent to the any types of absurdity and irrationality found in the military considering officers' honor. While the military should to respond to the civilian sector's request of military reform. Especially the two sides have to come to a common understanding to the security matters.

In this proces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military takes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a healthy and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sector. This is because the civilian sector can only form a positive perception and build trust toward the military from observing their internal reform, since the military does not and cannot impose changes outside of its domain. The civilian sector genuinely hopes that the military would come closer to the society by answering their requests through sequential improvement of military culture.

Key Words : Political Intervention, Authoritarianism, Civil-Military Relation, Military Culture, Civilized Control